

세계화의 트릴레마와 반체제적 사회운동

김 은 중*

I.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30년,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20년

라틴아메리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그가 선거에서 승리했던 1998년(12월 6일)은 남아메리카에 진보 좌파 정권이 새롭게 등장한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차베스의 집권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최초의 민중적 저항이었던 까라카스 사태(1989년)로부터 시작된 기층민중의 투쟁이 가져온 결과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 년 동안 엘리트 지배를 떠받쳐왔던 정당 체제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차베스의 뒤를 이어 브라질의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와 프리스피나 키르츠네르, 칠레의 미첼레 바첼렛, 우루과이의 따바레 바스게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가 연속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가 핑크빛 물결(pink tide)에 합류함으로써 남아메리카 10개국 중 8개국이 진보 좌파 벨트를 형성했다.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국가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해 저항하는 지속적인 사회운동이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룰라와 바스게스의 집권은 선거를 통해 꾸준히 대중의 지지를 얻은 결과였지만,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직접적으로 신자유주의 정권과 정당 정치에 저항한 사회운동의 결과였다.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의 사임으로 귀결된 볼리비아의 가스 전쟁(2003년)은 꼬차밤바시의 물 전쟁(2000년)으로 시작된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차빠레 지역의 코카재배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까를로스 메사 역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그 뒤 치러진 선거에서 새로운 경제정책과

*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교수

석유와 가스의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건 원주민 출신의 에보 모랄레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자밀 마우아드 정권을 붕괴시킨 에콰도르 민중봉기(2000년)의 거점은 ‘에콰도르 전국원주민운동(CONAIE)’이었다. 그 이후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시오 구피에레스도 또 다시 민중의 저항으로 정권에서 물러났다(2005년 4월).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경제위기 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공공분야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거리 시위, 공장 점거, 민중의회 수립 등 강력한 사회운동을 통해 델 라 루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브라질 대선에서 노동당 출신의 룰라 다 실바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지지 세력의 밑바탕에는 무토지농민운동(MST)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이라는 선언을 비롯 21세기 초엽에 남아메리카를 휩쓴 핑크빛 조류가 가져온 정치적 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회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II. 사회운동의 자율성의 위기와 원주민운동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를 다시 변화의 주체로 새롭게 등장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초국가적 자본의 공세를 등에 업은 신자유주의 모델에 저항하는 투쟁 전선의 중심이었던 사회운동의 성과이면서 한계를 의미한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사회운동의 목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혁명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통한 정권 교체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 교체 이후에는 사회적 변화의 의제들은 정부와 우파 사이의 전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사회운동은 국가중심주의의 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 그리스의 부도 위기를 진단한 칼럼에서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유럽의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의 트릴레마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¹⁾

1) Dani Rodrik, "Greek Lessons for the World Economy,"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rodrik43/English>. 로드릭은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세계화는 너무 멀리 나아갔는가?)을 출간했다.

세계 경제의 트릴레마란 경제적 세계화, 정치적 민주주의, 국민국가의 3가지 요소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와 국가의 주권은 경제적 세계화를 제한할 때 가능하며, 국민국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세계화와 민주주의를 양립시키길 원한다면, 국민국가를 포기하고 보다 확대된 국제적 통합 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은 경제 개방, 민영화, 규제 철폐, 노동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작은 정부를 요구했고, 그 결과는 사회적 양극화라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화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국민국가 내부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한 양극화의 해결을, 국민국가 외부에서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투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운동을 통해 진보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주변부의 국민국가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진보 정권과 사회운동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진보좌파 정권이 등장한 이후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간에 위축되고, 분열되고, 파편화되었다. 소수의 사회운동만이 진보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유지했을 뿐이고, 대다수의 운동은 보조금 등의 물질적 수혜를 받고 정권에 협조하거나 정부 조직에 포섭되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르헨티나의 빼계떼로스 운동이다. 대부분의 빼계떼로스 운동은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해체되거나 운동의 지도자들이 정부의 직책을 맡는 방식으로 정권에 포섭되었다. 90년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의 중심에 섰던 인권운동과 5월 광장의 어머니회는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빼계떼로스 운동의 토대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마당이었던 ‘구역의회(Asambleas barriales)’도 대부분 해체되었다.

세계금융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초국가적 자본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공세를 취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대륙적 상황과 결부되어 사회운동의 노선에 또 다른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광산 채굴,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콩과 사탕수수의 단일경작 추진, 셀룰로오스 섬유 채취를 위한 대규모 산림 재배(Complejo forestación-celulosa) 등은 초국가적 자본이 추진하는 새로운 상품

시장이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은 이러한 상품을 얻기 위한 초국가적 자본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데스 지역과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대대로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초기 신자유주의 모델의 적극적인 전도사 역할을 수행했던 보수 정권들 이후에 등장한 진보 정권들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모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 성급하게 거론되고 있는 ‘포스트-신자유주의’라는 수사학에 가려진 현실은 주변부의 주변부로 전락한 원주민들의 열악한 삶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브라질의 무토지농민운동이 주장하듯이, 물라 정권 하에서 바이오 연료의 산업화는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족 단위의 소농들이 토지에서 쫓겨나고 아마존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국가 권력이 재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침체 현상과는 달리 원주민운동은 중요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원주민운동이 이 경우에 속한다. 칠레의 마뿌체 원주민들은 뻬노체프 독재 시절에 만들어졌고 사회주의자를 자칭했던 리카르도 라고스 정권 시절(2000~2006년)에 또 다시 활성화되었던 반테러 법령의 잔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 광산-임업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사회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뻬노체프 군사 독재 시절에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처벌하기 위해 1984년에 만들어졌던 반테러법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며, 라고스 정권에 와서 마뿌체 원주민의 사회운동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로 새롭게 부활했다.

페루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광산 채굴이 가속화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 공동체는 CONACAMI(Confederación Nacional de Comunidades del Perú Afectadas por la Minería)를 결성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궤추아 원주민과 페루 기초공동체 조직인 CONACAMI는 1998년에 조직된 이래 미국이 추진했던 자유무역협정에 저항했으며,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저항하고 있다.²⁾ CONACAMI의 부의장인 마리오 빨라시오스 빠네스(Mario Palacios Panéz)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다국적 기업에게 양도된 광산의 면적은 7배가 증가했으며, 페루 수출액의 절반 이상이 광산업에서

2) CONACAMI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conacami.org/site/>.

얻어지고 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권이 추진했던 광산 개발정책을 통해 대규모의 광산업이 민영화되었고, 농민들의 소유였던 5,000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수용되었다.³⁾ 그뿐만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채굴 작업은 물과 공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ACIN(Asociación de Cambios Indígenas del Norte del Cauca)과 CRIC(Consejo Regional Indígena del Cauca)이 주축이 된 나사(Nasa) 원주민 집단의 오래된 투쟁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까우까(Cauca) 지방의 원주민들은 ‘Minga’라고 부르는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부가 콜롬비아 게릴라 소탕을 빌미로 자신들의 삶을 통제했던 정치적 억압에 대해 저항했고, 토지와 자유 그리고 생명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⁴⁾



〈어머니 대지를 위한 전 지구적 Minga〉 포스터⁵⁾

우리배 정권은 까우까의 원주민들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에 협조했다는 명목을 내세워 원주민운동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다. CRIC의 여성대변인인 아이다 킬꾸에(Aida Quilcue)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3) Luis Vitor, “CONACAMI: 10 años tejiendo resistencia a la minería,” <http://alainet.org/active/30470>.
 4) Minga는 에콰도르 원주민 언어로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동체의 협동 작업”을 뜻한다.
 5) 출처: radiolatinos.free.fr/movimiento_social.php?id.

미국의 콜롬비아 플랜(Plan Colombia)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우리베 대통령의 민주주의 안보 정책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무역협정이 포함된 새로운 규범은 이 땅의 물과 토지를 다국적 기업에게 양도하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원주민이 소유하는 토지와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전체 시민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원주민은 자신이 살던 토지로부터 쫓겨났고, 다국적 기업은 곧바로 그 땅을 착취하기 시작했다.⁶⁾

콜롬비아 정부는 원주민을 때로는 마약 밀매업자나 테러리스트로, 때로는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다. 원주민 공동체를 향한 군사작전은 원주민 공동체를 식민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원주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은 원주민들이 정부군에 협조한다는 빌미를 내세워 정부군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주민을 협박하고 탄압해왔다. 그러나 ACIN과 CRIC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판(Pan)아메리카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적극적인 투쟁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고 있다. 원주민들의 운동에는 대부분이 아프리카계 흑인인 사망수수 재배 노동자들, 농민들, 여성들, 도시 빈민들, 인권운동가들도 동참했다.

원주민운동 이외의 모든 사회운동이 약화되고 후퇴한 것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운동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앞서 언급한 광산 채굴, 콩의 단일재배, 셀룰로오스 섬유 추출을 위한 조림 같은 환경 문제와 결부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크고 작은 지방의 의회를 조직하고 다시 ‘시민의회 연합(Unión de Asambleas Ciudadanas, 이하 UAC)’을 결성하여 초국가적 자본의 광산 채굴에 맞서 적극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⁷⁾



6) <http://socialistworker.org/2008/10/27/indigenous-uprising-in-colombia>.

7) UAC에 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asambleasciudadanas.org.ar/?page_id=61.

8) 출처: asambleasciudadanas.org.ar/?p=863.

‘전국농민전선(Frente Nacional Campesino, 이하 FNC)’은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콩 단일재배에 반대하는 가족 단위의 소농들과 공동체 농업을 대표하는 200여개의 농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MOCASE(Movimiento Campesino de Santiago del Estero)처럼 역사가 오래된 조직과 더불어 농촌의 작은 소농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⁹⁾

브라질의 사회운동은 오랫동안 방어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룰라 정부 하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 심화되었다. 농업 개혁의 성과 면에서 평가할 때, 무토지농민운동의 입장에서 2009년은 최악의 한 해였다. 이는 사회적 권력 관계의 역학 구도 속에서 연방 정부가 브라질 농촌에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모델로서 ‘사업으로서의 농업(agronegocio)’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토지농민운동의 요구 사항을 대토지 소유나 토지 소유의 집중화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보상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무마하는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의 경우,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노조 지도자들에게 배푼 호의를 등에 업고 노조 활동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체제적 운동의 주체로서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고, 도시빈민운동 역시 활동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편화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들과 비교하면 볼리비아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다. 볼리비아의 사회운동은 위축되지 않았고, 정부와 우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위기에 처하게 했던 반정부 시위를 해결한 것도 백인/메스티소 과두 세력의 본거지인 산따끄루스 외곽의 가난한 원주민과 빈민 거주지인 ‘플란 3000(Plan 3000)’의 적극적인 투쟁 덕분이었다.¹⁰⁾ 볼리비아

9) MOCASE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www.prensadefrente.org/pdfb2/index.php/new/2006/08/13/p1898>.

10) Plan 3000은 산따끄루스 외곽의 거대한 빈민 거주 지역이다. 이곳에는 약 300,000명이 거주하는 데, 대부분 아이마라, 케추아, 과라니 원주민의 후손들이다. 1983년 페라이(Pirai) 강의 범람으로 3,000가구의 이재민이 산따끄루스 시 외곽으로 이주했으며, Plan 3000이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이재민들은 그곳에 집과 도로를 만들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개인 사업자에게 물을 사야만 했다. 한마디로, Plan 3000은 버려진 곳이었다. 그 뒤로 볼리비아 전역에서 빈민들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지금은 인구가 300,000명에 이른다. 1950년에 산따끄루스의 인구는 41,000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백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1952년에 산따끄루스는 볼리비아 국민총생산의 3%를 차지했으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가스 수출, 농산물, 목축업 등을 통해 2004년에는 국민총생산의 30%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Raúl Zibechi, “Bolivia: Plan 3000 - Resistance and Social Change at the Heart of Racism,” <http://upsidedownworld.org/main/news-briefs-archives->

의 사회운동은 과두제 세력이 정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III.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볼리바르 대안이 새롭게 출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까라카스 사태가 발발한 지 20년이 지났고, “이제 그만”이라는 사빠띠스따의 절규를 들은 지 16년이 지났다. 또한, 제1세계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지구적 운동이 폭발했던 ‘시애틀 전투’가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고,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첫 번째 세계사회포럼(WSF)이 개최된 지 10돌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시위를 범죄 행동으로 몰아가는 정치권력의 탄압을 겪었고, 우파가 조종하는 언론에 의해 극심한 공격을 받았다.

더 우려할만한 사태는 얼마 전까지 무조건적으로 사회운동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사회운동의 정당성에 대해 회의어린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언론에서 사회운동 조직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참여 지식인들의 역할은 언제나 사회운동과 비판적 동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동반 관계란 사회운동의 내부에서 현장의 활동가들과 일정 부분 차이를 유지함으로써 운동이 정체되고 변질되는 사태를 경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공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태도는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하고 보상정책을 통해 갈등을 잠재우려는 국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은 사회운동이 사회조직으로 변화되는 현상이다. 사회운동이 일상적인 정치적 실천의 상황에서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반면에, 사회조직은 일정한 위계질서를 가지며,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 지원을 받으며,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행정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사회운동이 사회조직화되는 현상에 대한 적절한 예는 비정부기구(NGOs)를 들 수 있다. 많은 비정부기구

가 위계화되고 정치권력에 포섭되는 경험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사회운동의 동력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좌파진보 정권에 사회운동이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좌파진보 정권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세계경제가 처한 트릴레마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세계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진보 정권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통합하기 위해 내놓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은 경제의 세계화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갈등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통제 방식으로 변질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정책의 목표를 해방정치에 두느냐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들(특히, 빈곤 계층)에 대한 혼육정치에 두느냐는 관점의 차이가 좌파진보 정권과 사회운동의 근본적인 분기점이 되고 있다. ‘통합과 해방(integración y emancipación)’이라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의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첫째, 엘리트 과두제의 청산이다. 민영화와 규제 철폐 등을 추진했던 첫 번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면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탄생한 새로운 정권들은 엘리트 우파의 전통적인 지배 구조를 붕괴시키지 않고는 안정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 엘리트 과두제는 지방의 수령 정치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후견인 제도의 조직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제도에 대한 개입과 선거 제도를 통제함으로써 가난한 기층 민중을 지배해왔다. 사회운동은 이러한 엘리트 과두제와의 투쟁을 통해 등장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지형도를 바꾼 사회운동의 물결은 이제 엘리트 우파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이 되었다. 새로운 정부들은 엘리트 우파 세력의 자리에 중앙 정부의 관료를 배치함으로써 후견인 제도의 조직망을 해체하는데 얼마간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이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새로운 지배 형태의 등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 현상이지만, 라틴아메리카의 군사독재가 정치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적 민주화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군사독재로 상징되는 ‘혼육적 권력(disciplinary power)’이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의 투쟁 덕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에 처한 자본의 ‘선제 개혁’의 결과이기도 했다. 세계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서면서 ‘발전주의의 신화’가 유효했던 시기에 앞세웠던 독재 권력이 더 이상 적절한 대리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본은 새로운 지배

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선제 개혁이었다. 따라서 독재 정권의 퇴장을 통한 ‘민주주의 촉진과 인권 신장’이 정치적 민주화의 표면적 사건이었다면, 새로운 초국적 생산-금융 체계의 자유로운 작동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심층적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촉진과 인권 신장은 초국적 자본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선제 개혁이었다.¹¹⁾ 앞에서 언급한 사회운동이 사회조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비정부기구도 일종의 ‘부드러운’ 지배 방식인 셈이다.

셋째, 사회운동의 자율성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사회개혁의 새로운 주체로 재등장한 국가는 이제 사회운동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분야에 참여하는 사회운동단체들의 비판적 자율성을 장려한다고 말한다.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사회운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기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을 지역 정치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들은 결코 사회구조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차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권력의 편에서 사용하는 ‘기동잔인’ 셈이고, 이를 통해 사회운동 간의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분산시키려는 전술이다.

IV.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위한 대륙적-수평적 연대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2009년 10월 볼리비아 꼬차밤바에서는 “아메리카-카리브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연대와 민중교역협정 정신에 토대를 둔 사회운동협의체 (Consejos de Movimientos Sociales del ALBA-TCP, 이하 CMS)” 제1차 정상회의가 이를 동안 열렸고, 그 결과가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되었다.¹²⁾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CMS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7차 “아메리카-카리브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연대와 민중교역협정(ALBA-TCP)” 회원국 정상회담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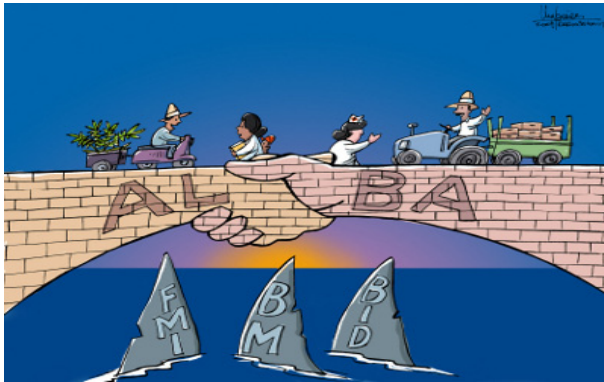
11) 윌리엄 I. 로빈슨, 「라틴아메리카의 다두제 - ‘시장민주주의’라는 모순 어법」, 에릭 허쉬버그 et. al.,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모티브북, 2008, pp. 144-145.

12)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osal/osal27/26PCCMS.pdf>, pp. 179-185. 이하 인용은 이 문서의 페이지임을 밝힌다.

에 대한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응답이었다.

선언문에 따르면, CMS의 목적은 “참살이(buen vivir)를 위해 인간과 ‘어머니 대지(Pachamamá)’의 조화로운 관계에 의지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의 도덕적·윤리적·정치적·경제적 원리를 기반으로 라틴아메리카 대륙과 전 세계의 다원성을 위해 투쟁하는 것”(183)이다. 회의에 참석한 사회운동협의체 대표들은 “90년대 이후 사회운동이 아브야·얄라(Abya-Yala)¹⁴의 경제적 하부구조뿐만 아니라 상부구조의 실질적이고 진정한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민주화와 탈식민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180)고 자평했다. 그러나 “고립되고 지역적인 투쟁에서 벗어나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브야·얄라의 차원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운동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184)고 강조했다.

2004년 차베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베네수엘라와 쿠바 간에 시작된 ALBA는 미주자유무역지역(ALCA)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2006년 볼리비아가 회원국이



〈Mémoire des Luttres〉에 실린 ALBA-TCP 이미지¹⁵)

13) ALBA-TCP는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y Caribe-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의 약자이다. 현재 ALBA-TCP 회원국은 남미 3개국(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중미 1개국(니카라과), 카리브 4개국(쿠바, 도미니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앤티가 바부다)이 가입했으며, 4개 초대국(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자메이카), 1개 옵서버(베트남)로 구성되어 있다. 중미의 온두라스는 2008년 10월 회원국이 되었으나, 2009년 7월에 일어난 쿠데타를 계기로 온두라스 정부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면서 2010년 1월 ALBA에서 탈퇴했다. 제7차 ALBA 정상회담은 36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폐회했다. <http://www.alternativabolivariana.org/images/declaracionVIIcumbrealba-tcp.pdf>.

14) 파나마 지역의 꾸나(Kuna) 원주민 언어로 콜럼버스 도착 이전의 아메리카 대륙을 가리키는 용어.

15) 출처: infosanonyme.blog.ca/.../.

되면서 에보 모랄레스의 제안으로 정식 명칭이 ALBA-TCP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9년 베네수엘라 마라카이에서 열린 제6차 정상회담에서 차베스의 제안으로 ‘대안(alternativa)’이 ‘연대(Alianza)’로 또 다시 바뀌었다. ALBA가 ALCA의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미주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배제됨으로써 ALCA의 영향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이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차베스의 주장이었다.¹⁶⁾

ALBA-TCP 정신에 입각한 사회운동협의체 구성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차베스였다. 2006년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차베스는 사회운동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ALBA-TCP의 핵심 기치인 ‘민중의 이익’과 ‘현물거래’에 토대를 둔 민주무역협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운동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 해 페루에서 라틴아메리카 통합이라는 틀 안에서 사회운동이 정치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의 정상회담과 병행해 ‘대안과 연계된 정상회담(Cumbre Enlazando Alternativas)’이 동시에 열렸다. 더 나아가, 같은 해 볼리비아 꼬차밤바에서 개최된 ‘남미국가 공동체(Comunidad Suramericana de Naciones)’ 정상회담과 나란히 민중통합을 위한 사회분야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2007년 4월 제5차 ALBA 정상회담에서 사회운동협의체 구성이 승인되었고, 같은 해 11월 ALBA 외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전체가 자국에서 사회운동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ALBA-TCP가 지난 5년 동안 위로부터의 대안과 연대를 모색했다면, CMS는 아래로부터 민중통합의 대안과 연대를 추구하는 첫 시도다. CMS가 외적으로는 초국가적 자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ALBA의 정치적 노선과 일치하지만, 내적으로는 사회운동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정치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한편으로는 ALBA-TCP와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 동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 왜냐하면 “ALBA는 종국적인 인간 해방의 깃발을 내걸고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간을 창출”(182)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언문은 CMS의 행동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183).

- CMS는 ALBA-TCP와 동일한 목적과 원리로부터 출발하는 포괄적이고

16) <http://www.noticias24.com/actualidad/noticia/60630/alba-deja-de-ser-alternativa-y-pasa-a-llamarse-alianza-bolivariana/>.

개방적이며 다양하고 다원적인 공간이다.

- CMS는 정치적 논쟁과 대표성을 제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고 민중을 이롭게 하는 공동의 아젠다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 CMS는 사회적 실천을 위한 또 다른 대의제도가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입장들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이다.
- CMS는 ALBA-TCP를 통합의 과정으로 규정하는 일반 원리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참여한다.
- CMS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운동 단체들의 실제적인 정당성과 대표성을 표현한다.
- CMS는 각자의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상화관계를 유지한다.
- ALBA-TCP 회원국의 정부와 CMS의 관계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결정한다.
- CMS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롭게 여성의 참여를 인정한다.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볼 때, CMS는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정치권력과 비판적 동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국가의 틀 밖에서는 대륙적 차원에서 수평적 연대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등장했다. 실제로 CMS는 2008년 7월 ALBA-TCP의 회원국이 아닌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 ‘브라질-농민의 길(Via Campesina-Brasil)’과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CMS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라틴아메리카에는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는 사회운동 단체들의 모임(Asamblea de los Movimientos Sociales)이나 2001년 세계사회포럼과 더불어 출범한 ‘아메리카 사회포럼(Foro Social de las Américas)’이 활동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변화를 통한 통합의 과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 간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과 연대는 대륙 내외적으로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이 추진력을 잃어가는 현상은 초국가적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고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국가의 기능이 재배치되는 상황에서 겪어야 될 필연적 과정이다. 라틴아메리카 진보정권이 경제의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영화에 제동을 걸며, 경제활동에 새로운 규제를 모색하는 것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주변부의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은 ‘신발전주의적 국가주의 (estatismo neodesarrollista)’를 버리지 못하고 편중된 원료채취 산업구조를 바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본의 집중이나 생태계의 파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강탈에 의한 축적(acumulación por desposesión)’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운동과의 협력과 연대가 없이는 뿌리 깊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고,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에서 벗어나기는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90년대 ‘역사의 종말’이 신탁으로 유포되었을 때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사회운동이 사회개혁의 주체로 등장했던 것처럼, 사회운동의 무용론이 거론되기 시작한 지금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여전히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90년대의 사회운동은 개별적이었고, 지금 태동하고 있는 사회운동은 대륙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